

“UR농산물 협상과 낙농육우산업의 대책(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재 옥

목 차

4. 외국의 CL, OL 제출현황
- Ⅲ. 향후 협상의 전망과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1. 협상전망
 2.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Ⅳ. 낙농육우산업의 조건과 대책

1. 산업의 여건
2.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1월호에 이어 계속)

4. 각국의 Country List와 Offer List 제출현황

가. 제출현황

의장초안 즉 협상의 원칙에 대한 미합의 상태하에서의 보조금현황표와 감축계획서의 제출은 마치 규칙이 없는 경지와 비슷하다는 논리에 따른 각국은 입의와 자의성에 따라 현황표와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각국은 공언하였다. 아직도 EC는 내부적인 의견조정 실패로 offer list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 CL 및 OL 제출

우리나라는 CL이 일단 제출되면 대외적인 신뢰차원에서 수정이 곤란하고 타체약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 및 설명의무가 있는 결국은 initial offer의 성격을 띠는 점을 감안하여 작성 제출하였다. 우선 국내 보조금 감축분야에 있어서는 AMS 감축대상을 쌀, 보리, 콩,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 채소류, 과실류 그리고 기타 등 12개품목으로 국한하였다. 그리고 감축대상정책으로는 시장가격 지지, 직접지불, 일부의 요소보조에 국한시켰으며 농업기구화, 일반서비스, 화재보상, 구조조정정책 등은

허용대상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실제 감축대상보조금은 NTC를 고려하여 계란에 대해서만 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경조치완화에서는 관세상당치(TE) 산출 대상품목으로서는 NTC대상품목과 계산불능 품목등 137개를 제외한 수입제도품목과 1986-90 개방품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수차례에 걸친 논란끝에 1990년 10월 29일 OL을 공식제출하게 되었다. 그 내용으로서 우선 국내보조금 감축은 가격지지 및 품목특정적인 투입재보조에 한하여 감축하고 AMS를 통하여 1997년부터 10년간 30%를 감축하되 개도국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6년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할 것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허용대상정책으로서는 개도국의 농업 및 농촌 발전과 관련된 정책, 농산물시장 개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구조조정정책, 식량안보등 NTC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농업유지 목적의 정책등이다.

국경조치 부문에 있어서는 관세화를 원칙적으로는 수용하되 NTC 목적달성에 필수적인 품목과 GATT 11조 2(C)항 적용대상품목은 관세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세화 대상품목의 관세화 방법으로는 1991년부터 7년간 걸쳐 점진적으로 해 나가되 관

세상당액은 관세화 전환년도부터 10년간에 걸쳐 최대한 30%정도 감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소시장접근을 보장하되 초기 관세할당량은 1991년부터 1986-1988년 평균수입량을 기준으로 하고, 수입 실적이 극소한 품목의 경우 국내 평균소비량의 1%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관세화과정에서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농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량규제조치가 허용되는 긴급수입 규제조치가 제도화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출보조부분에 대해서는 CL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의장초안에 명시된 수출지원사항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감축약속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보조금의 감축과 관세화의 과정에서 NTC 대상으로 선정된 15개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되어 있다.

Ⅲ. 향후협상의 전망과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1. 협상전망

농산물협상에서 미국과 함께 협상주도력상 쌍벽을 이루고 있는 EC가 보조금현황표(CL)와 감축계획서(OL)을 제출시한을 훨씬 넘기고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기한의 협상타결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다. EC는 1990년 10월 29일 회원국간정상회담을 열고 CL, OL제출을 논의하였으나 영국, 네덜란드만 찬성했을 뿐이며, 그후 10월 30일 외무, 농무장

관 연석회의는 회원국간의 의견차이로 끝내 무산되었다. 11월 3일부터는 GATT에서 TNC 회의가 있을 예정이나 이번이 없는 한 OL의 제출은 기대난망인 상태이며 12월2일로 예정되어 있는 통일독일 총선까지는 어떠한 협상안도 제출치 못할 것이라고 예상들 하고 있다.

EC는 애초에 협상에 임하면서 일부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그로 인한 재정적자의 문제가 심각해져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즉 외부의 힘을 빌려 자연스럽게 내부의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기본입장이었으나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입자유화와 수출보조금의 감축에는 완강히 반대해 왔다. 특히 EC는 미국으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되어 온 변동수입부과금제도(Variable Levy System)는 조건부로 관세화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으나 수출보조금을 급격하게 감축하지는 주장에는 난색을 표명하였던 것이다. EC는 농산물 수출국가인 미국이나 케언즈그룹에 비하여 경쟁력이 없는 상태하에서 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출보조금지급이 금지되었을 경우 심각한 재고누증과 재정적자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이나 케언즈그룹은 수출보조금 완전철폐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측면보다는 수입국들의 비관세장벽이 철폐되므로서 수입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많은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다는데

(단위)

	쌀	보리	콩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채소	과일
I. 시장가격지지	4703979	278982	194888	26977	526332	447203	-	-
II. 투자보조금	14577	2307	2120	73	919	1731	7572	2613
III. 일반서비스	647696	16172	6294	217	96332	21766	109547	7315
IV. 총보조(AMS)	5366522	297461	203302	27267	623583	470700	117119	9928
V. 정부정책보조(II+III)	662273	18479	8414	290	97241	23497	117119	9928
VI. (V / VI)	0.123	0.062	0.041	0.011	0.156	0.0499	-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 협상자료

중점을 두고 있다. 농산물 수출 국가의 입장에서 수입국가의 비관세장벽으로 수입물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효과 뿐만 아니라 가격전도(price transmissibility)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적인 가격파동이 증폭된다고 비난하여 왔다. 현 시점에서 미국과 EC의 의견조정은 어려워 보이지만 타협이 이루어 진다면 미국은 EC가 주장하는 국내보조, 국경조치, 수출보조 등을 포함하여 총체적인 AMS를 줄여 나가자는 안(global approach)을 수용하는 대신 EC는 이와 같은 AMS 감축율에 있어서 양보를 하는 것으로 타결될 전망이다. 즉 총체적인 AMS를 감축해 나가되 감축율은 EC가 주장하는 것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모든 비관세조치의 철폐와 국내보조금의 감축은 기정사실화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NTC에 의한 예외초치는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반영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NTC를 주장하는 수입국간에도 관심사항 및 보호품목에 차이가 있어 공동조정을 취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도미노현상을 우려하여 농산물그룹의장과 미국 등이 예외품목 설정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로 4년여를 거쳐 논의해온 농산물협상은 지연될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으나 결렬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UR 전체협상의 성패는 농산물 협상결과에 크게 좌우되고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의견조정이 이루어져 타결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 농산물 무역은 대폭적으로 자유화되고 개혁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다.

2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국경보호 조치로 인한 농업보조의 비중이 매우 큼을 감안할 때 관세화와 관세상당액의 감축은 농가소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품목별로 농가보조를 정부정치에 의한 국내보조와 국경보호조치로 인한 농가보조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서와 같이 정부정책을 통한 농가보조는 2-7%에 해당되며 쌀의 경우에만 수매정책으로 12%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의 UR 농산물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정부보조감축보다는 관세상당액(TE)의 감축이 국내농업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상당액이 계속 감축되는 과정에서 그만큼 경쟁력 향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국내 농산물 생산기반유지가 어려울 것이며 또한 국제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성이 그대로 국내에 전가되어 국내 농산물가격의 파동이 빈발할 우려가 있다.

관세상당액이 30-40% 감축될 경우 농가소득 피해액은 주요 40여개 농산물을 완전 수입개방 했을 때의 피해액 5조 4천억(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년 연구자료: 1988년 기준)인 점과 농산물 공급곡선이 우상향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5조 4천억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2조 7천억원(1988년 농산물 총생산액: 13조)쯤으로 예상된다. 이 액수는 일시에 감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년도와 1988년과의 농가소득과의 차액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내 농업지원정책이 점진적 감축 대상이 되고 있는데 1988기준으로 이와 같은 보조금은 1조 400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국내보조의 감축으로 우선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농업투자가 대폭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점이다. 농업부문의 평균 자본수익률은 6~8%(농촌경제연구원 추정)으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이차보상지원이 중단될 경우 농민에 의한 농업부문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조달과 농업기계화의 달성이 필수적이나 농기계구입보조가 없어질 경우 농기구 수요감소와 농업기계화 정체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수출증대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과 해외시장개척지원이

관한해 질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농촌부문의 생산요소인 토지와 노동력, 자본설비는 부문간에 유동성이 매우 적은 것이 특징이므로 농산물 수입개방후 자원의 유희화비용은 굉장할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인 불안정은 증폭될 것으로 본다.

IV. 낙농육우산업의 여건과 대책

1. 산업의 여건

우리나라 축산업의 여건으로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식품수요가 질적으로 고급화되므로서 축산물 생산공급의 증대 필요성이 있는 반면 GATT의 BOP조항졸업 및 UR농산물 협상으로 인하여 수입도 크

게 늘어날 차제에 있다. 국민 총생산 중에서 농림수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한 반면 농업조수입중 축산수입비중은 1970년 5.6%에서 1987년에는 15.8%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업은 수입개방에 대처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며 식품소비의 고급화에 부응하여 축산을 농가 주소득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지면적의 협소와 대륙성 기후등 자연적 입지여건상 축산의 외연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초기조성과 규모의 경제성 달성에 난점이 많은 관계로 경쟁력 향상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자연적 입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국형 축산의 개발이 필요하다

표 1 젖소 사육두수 및 호수

(단위 : 천두, 천호)

구분	년도	'70	'75	'80	'85	'86	'87	'88	'89	85-89년
		평균증가율								
사육두수	전체	1310	1642	1541	2943	2707	2386	2039	2051	- 8.6
	한우	1286	1556	1361	2533	2370	1923	1559	1536	- 11.8
	젖소	24	86	180	390	438	463	480	151	- 7.2
사육호수	전체	1105	1286	967	1092	1034	892	738	690	- 108
	한우	1102	1277	949	1048	991	854	702	645	- 11.1
	젖소	3	9	9	44	43	38	36	36	- 4.9
호당평균사육두수 (한우)		1.2 (1.2)	1.3 (1.2)	1.6 (1.4)	2.7 (2.4)	2.7 (2.4)	2.7 (2.3)	2.8 (2.2)	3.0 (2.3)	2.7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주요통계, 1990

표 2 쇠고기 수급동향

(단위 : 천두%)

구분	'70	'75	'80	'85	'86	'87	'88	'89	
소비	37.3	70.3	100.0	120.4	147.9	152.0	141.5	144.5	
공급	국내생산	37.3	70.3	93.1	115.7	144.3	152.0	132.2	90.0
	수입	-	-	6.9	4.7	3.6	-	9.3	54.5
1인당소비량	1.2kg	2.6	2.6	2.0	3.5	3.6	3.4	3.4	
자급율	100%	100.0	93.1	96.1	97.6	100.0	93.4	62.3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주요통계, 1990.

표 3 우유의 수급동향

(단위 : 천두%)

구분	'70	'75	'80	'85	'86	'87	'88	'89
소비	50	162	412	991	1162	1425	1652	1642
공급	국내 생산	48	160	452	1006	1154	1413	1632
	수입	-	-	-	2	-	-	-
1인당 소비량	1.6	4.6	10.8	23.8	28.2	34.3	39.4	38.7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주요통계, 1990

고 하겠다.

가. 생산 및 수급동향

소의 사육두수는 1985년 2,943천두를 정점으로 줄어들어 1989년 현재 2,051천두로 년평균 8.6%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한우는 정부의 소수매사업 및 농가의 소 사육의욕 감퇴 등으로 11.8%의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어 1989년 현재 1,536천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젖소의 경우는 한우와 달리 사육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1989년 현재 515천두

또한 우유의 수급은 품목의 특성상 수입은 거의 없으며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1인당 소비량은 1970년 1.6kg에서 1989년 38.7kg으로 비약적으로 증대하였다. 이는 식품소비 고급화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우유소비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표 3).

로 년평균 7.2%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호당 평균사육두수는 1989년 현재 2.7두로(특히 한우의 경우 전체 한우사육농가의 80.6%가 1~2두) 생산규모가 극히 영세한 실정이다(표 1).

한편 쇠고기 수급동향을 보면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1인당 소비량은 1970년 1.2kg에서 1989년에는 4kg으로 거의 3배의 이른 반면 생산은 8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부족분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급율은 1989년의 경우 62.3%에 불과한데 자급율은 더 떨어질 전망이다(표 2).

나. 산업의 현황

우리나라 소 산업의 특징은 외국과는 달리 광활한 초지조성을 통한 사육형태가 아니고 농후사료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업형, 영세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젖소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조사료 투입이 필수적이므로 우유 생산에 차질이 올 수 있으며 생산비가 높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농촌노동력의 부녀화, 노령화 및 인건비 상승으로 사육여건은 열악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축산 폐수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여 최근 소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육호수와 사육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육류 유통시설 및 품질등급 제도가 미비하고 가격제도가 경직되어 있는 등 수많은 불합리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나 사육조건의 열악 및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농가 수입 원으로서의 역할을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소득증대, 식품소비구조의 서구화 등으로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의 소비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2000년 1인당 육류소비량 32kg)이므로 성장잠재력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젖소의 경우에는 낙농의 도시근교 집중에 따라 조사료 이용이 저조하여 생산성이 낮다. 예를 들면 경기지역 젖소 사육은 전국의 51%에 해당되며, 조사료 이용율은 40% 수준(일본 52%)에 해당되며 두당 연간 산유량은 5,100kg(일본 5,700kg)에 불과한 현실이다. 또한 음용유 위주의 우유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우리나라의 음용유와 가공유 비율은 77 : 23(선진낙농국가 30 : 70)이다. 이와 더불어 집유선 중복에 따른 비용과다와 유통질서 문란의

문제점이 있으며 원유의 공영검사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원유검사의 객관성 결여로 농가의 불만이 많은 것이다. 아울러 정부지정에 의한 행정지도가격제도와 유지율에 의한 단일가격제도로 원유가격제도가 매우 경직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젓소산업은 우유의 특성상 수입이 어렵고 유우유은 수입되는 저급육과 경쟁한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유희화되는 토지를 초지로 이용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가. 한우

쇠고기의 경우 아직까지는 수입쿼타제를 통하여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 소 산업을 보호하여 왔지만 '89 BOP 줄임 및 UR 농업협상 종결에 따라 향후 개방의 폭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생산원가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 배양이 절실한 실정이다.

1989년 현재 우리나라 쇠고기의 kg당 소비가격은 5,424원인데 비하여 주요 수출국의 수출가격(CIF)은 이보다 3배 가량이 싼 1,867원이다. 따라서 육질개선 등 품질경쟁력 제고와 함께 가격경쟁력 확보도 중요한 과제라고 보겠다.

1) 품질개량

우선 한우의 경우 산육량 증대와 고급육 생산을 위한 육용우 개량이 필요한 바 출하체중은 현행 450kg 내외에서 550kg 이상이 되도록 하고 등심의 면적을 증대시키고 지방교잡이 양호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품종개량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는 가칭 "가축개량사업단"을 설치하여 현재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량업무를 통합체계화하여 개량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우량 한우의 품종개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 ① 현재 54개소의 개량단지들 최소한 200개 정도로 확대하고
- ② 우량 암소를 심사, 선택하여 등록, 보호토록 하며

③ 등록우 보호를 위하여 송아지 생산시 보호료를 지급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④ 등록우는 우량종모우와 계획교배에 의해 우량종축을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2) 쇠고기의 유통개선

소가격 안정대제도의 확립

소값 및 사육두수의 불안정으로 소 사육 농가소득이 안정화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던 바 소값안정을 위한 가격안정대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먼저 송아지에 대하여는 송아지 생산비에 일정이윤(10% 수준)을 보장하는 안정대를 정하여 가격이 안정대보다 하락할 시에는 하락분의 85%정도를 보상해 주고 상승시에는 상승분의 50%를 적립토록 하여 송아지가 가격에 관계없이 안정되게 사육되게 하여야 한다.

쇠고기에 대한 가격안정대사업은 송아지값 및 큰소 생산비를 감안한 안정대를 설정하여 쇠고기값이 기준가격 이상 상승시에는 비축 쇠고기를 방출하고 하한가격 이하로 하락시에는 수매비축을 하여 쇠고기값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가격안정대 사업이 실시되면 현행의 쇠고기가격 연동제는 수정 내지 폐지될 필요가 있다.

도축시설의 소규모화와 가동물의 저조는 도축기능의 비능률을 초래하여 생산 원가를 높게 할 뿐만 아니라 물을 먹인 소등 부정육의 유통을 조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규모확대와 대도시 주변의 경우 포장 및 가공시설을 함께 갖춘 대규모 도축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등급화 및 포장화의 정착

도체의 등급화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매매자간의 판매를 촉진시키고 유통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여서 유통비용을 낮추는 등의 잇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쇠고기를 포함한 모든 육류의 등급제실시가 시급한 실정인 바 현행 입법추진 중인 도체 등급제의 조기

실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판매를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크기별 포장육의 판매도 적극 권장하여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3)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비육우나 유우나 할 것 없이 농후사료만으로 사육하는 것은 경제성 면에서나 효율면에서 조사료와 병행하여 사육하는 것보다 뒤지게 마련이다. 초지조성을 위한 토지나 노동력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본다.

조사료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산지초지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토면적의 7할이 산지인 우리나라는 개발 여하에 따라서는 초지조성의 가능성이 자못 크다고 하겠다. 산지초지 조성을 위하여는 우선 초지개발 적지를 확보(500천ha 이상)하여 초지진입 도로, 전기, 수자원등 기반시설을 국가지원으로 확충하고 산지형 초지관리 기계화로 성력 생산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초지이용농가에 대해서는 가격면에서 특혜를 주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본다. 그리고 대단위 초지를 개발하고 우리나라의 지형 및 기후에 적합한 초지조성 기구개발 등을 담당할 공영의 가칭 "토지개발사업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한편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하여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대해 종자대를 대폭 보조해 주고(현행 40%), 재배 및 이용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기계화를 추진해야 된다. 벳짚과 보리짚과 같은 부존사료작물의 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해

- ① 벳짚, 보리짚에 대하여 산, 알칼리 처리이용기술을 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지원해주며
- ② 엔실리지 조제에 개미산을 이용한 품질개선 기술을 보급해야 할 것으로 본다.

4) 사료수급 및 가격안정

부존사료의 여건상 농후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육우산업 및 낙농산업등 축산업이 비교우위를 지니기는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어차피 국내산 농후사료를 이용할 수 없을 바에야 외국산 농후사료를 값싸게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급하는 것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내 최소농업 유지에 저축이 안되는 범위에 있어서는 원료사료와 배합사료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곡물과 사료의 세계시장가격 변동 등이 국내사료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료원료의 장기구매를 도모하고 비축시설을 확충하며, 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자가 배합사료 이용형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축협공장과 계열화 축산단지등의 자기 배합사료 공장시설 신설 및 확충에 대한 지원이 뒤따라야겠다.

5) 분뇨폐수 시설의 확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우와 낙농농가를 포함한 많은 축산농가는 분뇨 및 폐수처리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높은 비용소요로 인하여 분뇨 및 폐수처리는 축산경영에 중요한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1987년 이래 분뇨 및 폐수처리 시설을 보급한 이래 1989년말 현재 축산폐수 정화설치의 보급율은 56%에 이르고 있으나 양축농가의 영세성, 기술의 부족과 농민의 의식부족 그리고 무허가 축산시설의 난립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분뇨 및 폐수처리를 위해 집단화된 지역에는 공동으로 축산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집단화되지 않은 산재 축산농가의 분뇨 및 폐수처리를 위해 군단위 수거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적 지원으로 처리가 잘 되는 공법 등을 개발 보급하며, 가축분의 퇴비화를 위한 비료관리법의 개정이 요청된다.

나. 젖소

젖소의 경쟁력 제고방안은 앞서 살펴본 한우의 경

우와 큰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 즉 젓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도 품종개량, 유통시설, 사료수급 및 가격안정, 분뇨 및 폐수시설의 확충 등이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한우와 중복되는 부분은 언급을 생략하고 특히 젓소에 관한 경쟁력 제고방안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품질개선

현행 우리나라 젓소의 산유량은 5,100kg정도인데 앞으로 품종개량등을 통해 최소한 6,000kg이상으로 높여야 하고 유지율도 3.6%에서 3.7%이상이 되게 해야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 ① 유우군 능력검정의 내실화를 기해야 되는 바 이를 위하여는 착유두수의 20%정도를 검정대상으로 확보하고
- ② 고능력 젓소를 이용한 후보 종모우를 생산하고
- ③ 고능력 유우정액 및 수정란 수입을 통하여 개량을 추진하며
- ④ 고능력 젓소를 중심으로 한 판매시장을 정착화해야 할 것이다.

2) 가공원료유에 대한 부족분제도 도입

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것도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유제품의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가공유의 가격을 낮게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이때 정상원유가격과의 차액은 별도 재원으로 보전하는 부족분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바이다.

현행 낙농농가 및 업계는 원유재고가 크게 누적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제품의 소비확대가 크게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하여는 유제품

3) 집유선 일원화를 포함한 유통개선

집유선의 다원화에는 일원화에 비해 비용면에서 불리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집유업무의 일원화에는 여러가지 대안이 있겠으나 수급조절 및 집유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전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보겠다. 그리고 유질의 향상을 위해 원유검사를 공영화하고 위생 및 용도별로 가격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

경제상식

□ 간접금융과 직접금융 □

금융 중개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금융을 간접금융(間接金融)이라 하고, 자금의 공급자가 직접 기업의 주식이나 사채(社債)를 매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직접금융이라 한다. 직접금융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증권시장 또는 자본시장(資本市場)이라 한다. 자본시장은 또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된다. 발행시장이란 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이나 사채를 일반에 공모하거나 특정기관에 인수시킴으로써 자금을 공급받는 것의 미하여, 유통시장은 이미 발생된 유가증권의 매매시장을 뜻한다.